

광주 일부 학교-여행사, 수학여행 입찰 짬짜미 의혹

특정 여행사 수년간 반복적 낙찰에 “업체 맞춤형 불공정 입찰” 제기
최저금액보다 수천만원 비싸게 계약...학부모·학생에 부담 전가 우려
최저가 입찰에도 제안서 부적격 판정...학교측 “평가위서 공정 평가”

광주 지역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학여행 사업자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전남 일선학교들이 ‘최저가 입찰제’를 통해 여행사 입찰을 받고 있는데도, 정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들은 ‘제안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하면서 특정 업체가 수년 간 낙찰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여행업계에서는 ‘학교별 전담 여행사’ 현상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8일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개찰된 S중 2학년 수학여행 입찰의 경우 6개 업체가 참여해 9446만8000원을 제시한 A여행사가 낙찰됐다.

S중이 제시한 기초금액은 9863만원으로, 낙찰 업체의 투찰률(기초금액 대비 제안금액의 비율)은 95.528%였다. 2순위는 9576만원(투찰률 96.842%)을 제안한 B여행사였다.

A여행사는 2022년부터 2025까지 5년 연속 해당 학교의 수학여행 사업을 낙찰받았다.

반면, 7400만원을 제시한 C여행사와 8638만원을 제안한 D여행사는 모두 ‘제안서 부적격’ 판정

을 받아 탈락했다.

비슷한 현상은 T고에서도 나타났다. 지난달 4일 개찰된 수학여행 입찰(기초금액 1억 7050만원)에서 A여행사는 1억 6687만원(투찰률 98.569%)을 제시해 낙찰됐다. 2순위는 1억6789만원(투찰률 99.171%)을 제안한 B여행사였다.

최저가인 1억 3250만원을 제안한 C여행사는 여기서도 ‘제안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6일 개찰된 전남 E학교 수학여행 입찰(기초금액 1억 2955만원)에서도 A여행사가 1억 1512만원(투찰률 89.392%)을 제안해 1순위로 낙찰받았다. 그보다 훨씬 낮은 금액인 1억원을 제시한 C여행사와 다른 여행사는 모두 ‘제안서 부적격’ 처리됐다.

탈락한 여행사들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안서 공개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일부 여행사들 사이에서 ‘불공정’ 입찰 의혹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비싼 낙찰가가 학생·학부모에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저가 입찰 방식임에도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여행사가 잇따라 낙찰을 받고, 정작 낮은 가격을 제

안한 여행사는 일괄적으로 제안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하고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광주 지역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투찰률이 90여%에 달하는 업체가 연속 낙찰을 받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며 “입찰을 하기 전부터 업체에서는 ‘어디 학교는 어디에서 한다더라’는 소문이 다 퍼져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입찰이라는 제도 자체가 경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려는 취지가 있는데, 오히려 일정 금액 이상을 제시한 업체가 계속 선정되는 구조는 기이하다”며 “국공립에서는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어려운데,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일명 서로가 싸고기는 ‘짬짜미’ 구조도 가능한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각 학교 측은 7~8명 위원을 모아 평가위원회를 꾸리고 여행업체에 대한 점수를 매겨 공정하게 평가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와 기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제안서 부적격은 평가 결과일 뿐이며, 수학여행은 기존에 잘한 업체가 다시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체가 과거 행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다음에도 선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본다”며 “예전보다 지금의 입찰 구조는 오히려 많이 공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기능경기대회 ‘초집중’ 8일 광주시 북구 광주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광주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보석가공 부문의 참가자가 집중해서 가공작업하고 있다. 11일까지 진행되는 기능경기대회는 지역 내 9개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236명 38개팀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룬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고소사태 ‘시끌’

공사 지연에 조합 설립조차 못해
동구 고운라피네 계약자 60여명
환불 요구하며 시행사 줄고소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동주택 분양·전세 시장도 가라앉은 상황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둘러싼 지역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사는 커녕, 주택 조합 설립조차 늦어지면서 계약자들이 경찰에 수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8일 광주시 동구와 동부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 무등산 고운라피네 계약자 60여명이 임대주택 시행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산수퍼스트 유스टे이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창립준비위)는 지난 2023년부터 ‘무등산 씨앗 포레’라는 이름으로 343세대가 들어서는 민간 임대 아파트를 건립, 10년 전세형으로 공급키로 하고 시행사를 통해 입주자 모집에 들어갔었다.

창립준비위는 지난해부터 명칭을 ‘고운라피네’로 바꾸고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지만 애초 준비위 설명과 달리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계약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준비위측은 애초 2024년 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까지 조합 설립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토지 조차 확보하지 않았다는 게 계약자들 설명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협동조합형 임대 아파트’의 경우 건설 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을 확보하고 발기인 5인 이상을 모아 조합을 설립한 뒤 모집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자들은 이같은 점을 들어 최초 계약금(3000만~3500만원)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행사가 거부하자 경찰에 줄지어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 당시 ‘사업이 무산될 시 출자금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도 체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피해 계약자들 설명이다.

동부경찰에만 60여명의 계약자들이 경찰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경찰은 최근 시행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계약자들은 특히 해당 시행사측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등의 절차에 가입하지 않아 자칫 계약금을 때릴 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이와관련, “아파트 공사 지연 등과 관련,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거나 본인 과실이 인정되는 계약자 외에는 환급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출생 신고 않고 아동 유기 부모들 잇따라 법정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동을 유기한 부모들이 잇따라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4)씨 등 2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전 연인 B씨와 공동해 지난 2011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택 마당에 신생아 자녀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유기하려는 아이가 내 아이인지조차 몰랐고, 당시 망을 보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달 17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011년 자기 아들을 슈퍼마켓 앞 길가에 유기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 C(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C씨는 당시 다른 자녀 2명을 홀로 키우던 상황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의 아동 유기 정황은 지난 2023~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출생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

시민단체, 영암 돼지농장 네팔 노동자 사망 관련 사업주 고발

영암지역 돼지농장의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가 부당 노동행위 등을 주장하며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8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사망 사건이 발생한 영암 돼지 사육농장에서 일했던 이주노동자들이 폭언, 폭행, 협박, 과중노동 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압박에 해당 농장주의 일방적인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어 피해를 입었다는 게 단체측 주장이다. 단체측은 노동자들의 실수를 이유로 육설과 폭행도 반복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노동자들은 잠깐 앓았다거나 웃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고 CCTV가 없는 장소로 불려가 먹살을

잡히거나 펜으로 가슴을 찌르는 가혹행위도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고발장에는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해 근로계약을 맺은 이주노동자들이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월 4회 휴무로 명시된 계약서와 달리 월 1회만 휴식을 하는가 하면, 반복된 무급 잔업, 기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해 임금을 삭감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78명이 한 팀으로 사육 농장에 근무하면서 정작 실제 업무량은 1516분에 달했다는 게 이주노동자네트워크 주장이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전남도의회에서 이주노동자 정책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어 실태를 공유하고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